

민주화 이후 한국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결정요인 분석*

조진만 | 인하대학교

| 논문요약 |

민주화 이후 투표 참여의 지속적인 감소 문제는 한국의 민주주의의 공고화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날 큰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비교하여 그 정치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은 정치적 대표성 문제와 관련하여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대상으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재·보궐선거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고려하여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고찰하고 있다.

연구 결과, 이전 총선 투표율, 재·보궐선거 경쟁도, 지역주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은 시점 또는 낮은 시점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에서 재·보궐선거는 지역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시점 중앙정치의 쟁점들이 크게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라는 정치적 의미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재선거, 보궐선거, 투표율, 대통령의 국정운영, 중간평가

* 본 논문은 2009년 한국정당학회에서 “4·29 재·보궐선거, 2010 지방선거와 정당정치”의 대주제로 주최한 하계학술회의에서 발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리서치보고서 『재보궐 선거와 정당운영: 지방화와 한국의 정당정치』에 수록된 “재·보궐선거의 투표 참여와 사회적 대표성” 초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지적과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I. 서론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최장집 2002). 그리고 이와 같은 우려 속에는 민주화 이후 실시된 선거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참여 부족의 문제가 그 핵심에 놓여 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공고화해야 할 한국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투표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정치적 대표성 및 안정성의 문제(Lijphart 1997; Powell 1982; Verba and Nie 1972)와 관련하여 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의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와 분석들이 이루어졌다(강경태 2003; 강원택 2002; 2008; 김왕식 2008; 김용철·윤성이 2004; 김옥 1998; 1999; 2006; 김재한 1993; 김진하 2008; 이남영 1993; 이재철 2007; 이준한 2006; 정준표 2008; 조기숙·김선웅 2002; 조성대 2006). 특히 이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전국적인 선거가 실시된 직후 조사된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미시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유권자들이 무슨 이유로 투표에 참여 또는 기권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투표 참여의 문제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시되지 않는 선거에 대한 연구(박명호 2006; 조진만 2005)와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한정훈·강현구 2008; 황아란 1996)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투표 참여와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 이 같은 특징이 나타났던 것은 전국적인 선거의 중요성, 설문조사자료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의 가능성, 그리고 미시적 차원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 갖는 유용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이하 대선),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 지방자치선거(이하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지역선거적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실시되는 재선거와 보궐선거(이하 재·보궐선거)의 10%~20%대 낮은 투표율 문제는 선거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심각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에 대한 논의와 경험적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실시된 총 81회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¹⁾를 대상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선거구별 투표율의 차이를 이끈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선거와 비교할 때 재·보궐선거는 어떠한 특징들을 보이는가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 문제를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낮은 투표율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과 노력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제안을 하고 있다.

II.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설의 정립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대중(*demos*)이 정치주체가 되는 정치체제이다. 즉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치문제에 대한 대중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선거에서 투표 참여의 문제를 중시하는 이유는 투표율이 낮을수록 사회의 다양한 선호들이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조성대 2009, 227-228)과 적은 수의 유권자 지지로 당선된 정치인의 경우 정치적 대표성 내지는 정통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 이 중 1998년 1월 6일 광주 동구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의 경우 한나라당 김용욱 후보가 중도에 사퇴하여 새천년국민회의 이영일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을 하나의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기적인 여론조사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3년부터 실시되었다. 그러므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없었던 노태우 정부에서 실시된 다섯 번의 재·보궐선거는 다중 회귀분석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민주화 이후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선거구와 투표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그리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는 〈부록〉을 참조.

하지만 사회경제학적 접근(Lazarsfeld *et al.* 1948; Wolfinger and Rosenstone 1980)과 합리적 선택이론(Downs 1957; Riker and Ordeshook 1968)의 관점에서 투표 참여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듯이 선거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연령, 교육과 소득 수준, 그리고 민주시민의식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성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거에서 유권자의 한 표가 투표결과를 결정짓는 데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Ferejohn and Fiorina 1974) 합리적 유권자들은 투표 참여의 유인을 갖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정책과 선거쟁점들에 대하여 무지한(*rationaly ignorant*) 행태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정치인의 경우에도 대표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 전반의 모든 선호들을 고려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정당이나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개연성도 충분히 높다. 그리고 비자발적 동원투표(*mobilized voting*)의 문제점이나 유권자의 의사표현 수단으로서 기권이 갖는 정치적 의미도 존재한다(강원택 2002; 김옥 1999). 그러므로 현실의 민주주의에서 계몽되지 않고 책임감이 결여된 대중의 높은 투표 참여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투표율과 정치적 대표성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란들이 존재한다(Caplan 2007; Huntington and Nelson 1976; Weisberg *et al.* 1999, 68-86; 조성대 2009).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과 정치적 대표성 간의 관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일정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적실성 있는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재·보궐선거의 일반적인 특성들에 대한 논의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일단 전국적인 선거와 비교하여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특징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적 비중의 차이 때문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실시된 선거의 투표율 현황을 살펴보면 몇몇 예외적인 경우들²⁾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비슷한 시기를 대상으로 비교해볼 때 정치적 비중에 따라 대선→총선→지

〈표 1〉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의 투표율(%)

| 대선 | 총선 | 지방선거 | 재·보궐선거 |
|--------------|--------------|--------------|---------------------|
| 89.2 (1987년) | 75.8 (1988년) | 68.4 (1995년) | 71.0 (13대 국회, N=5) |
| 81.9 (1992년) | 71.9 (1992년) | 52.7 (1998년) | 55.3 (14대 국회, N=11) |
| 80.7 (1996년) | 63.9 (1996년) | 48.9 (2002년) | 46.8 (15대 국회, N=20) |
| 70.8 (2002년) | 57.2 (2000년) | 51.2 (2006년) | 34.3 (16대 국회, N=20) |
| 63.0 (2007년) | 60.6 (2004년) | | 35.1 (17대 국회, N=19) |
| | 46.3 (2008년) | | 41.2 (18대 국회, N=5) |

출처: 15대 국회 광주 동구 보궐선거의 경우 무투표로 진행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방선거→재·보궐선거의 순으로 투표율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목격할 수 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국적인 선거와 비교하여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데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점도 낮은 투표율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경우 민주화 이후 실시된 재·보궐선거에 제한하여 투표 참여의 문제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종류에 따른 투표율 차이의 문제는 통제가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내용 이외의 재·보궐선거 특성들과 집합자료 수준에서 조작화가 가능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선거구별로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 2) 〈표 1〉을 보면 대선의 경우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투표율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17대 총선, 2006년 지방선거, 17대 국회와 현 18대 국회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의 경우 직전에 실시된 선거와 비교하여 투표율이 다소 상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17대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다소 상승한 이유는 1인 2표제가 도입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즉 1인 2표제 정당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순수투표(*sincere vote*)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투표 참여를 높이는 유인이 되었다(조진만·최준영 2006a; 2006b). 그리고 17대 총선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쟁점이 투표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이준한 2006). 다만 민주화 이후 대선의 투표율이 올라간 적이 없다는 점, 18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다시 낮아졌다는 점, 투표율이 상승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아직까지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현재 18대 국회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의 사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각급 선거에서 현 수준의 투표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좀 더 그 추이를 지켜본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맞추고 있다.

왜 한국은 민주화 이후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설명이 가능하다. 즉 정치적 민주화와 규제적 성격의 정치관계법 개정 등에 따른 동원효과의 감소, ‘민주 대 반민주’의 쟁점을 대치할 수 있는 쟁점의 부재,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대안적 정치참여 기제의 형성과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에 따른 정당일체감과 정치적 효능감의 감소 등 다양한 차원에서 민주화 이후 투표율 하락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거시적인 요인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선거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거시적 요인들은 동일한 선거에서 각 선거구마다 차이를 보이는 투표율을 설명하는 데 있어 유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거시적 요인들이 유권자 개인의 미시적 수준에서 어떻게 작용하며, 그것이 선거구별로 어떠한 차이를 이끄는지를 파악하지 않는 이상 선거구별 투표율 차이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적실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더욱이 거시적 요인들은 집합자료 수준에서 조작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재·보궐선거의 특징과 가용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투표율에 대한 연구가설을 정립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재·보궐선거의 정치적 비중이 떨어진다는 것이 투표율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바 있듯이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국적인 선거와 비교하여 정치적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보궐선거에 한정하여 투표율의 문제를 고찰할 경우 이 논리로는 선거구별로 투표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논리는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선거와 재·보궐선거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양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들의 속성은 동일하다고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재·보궐선거의 특성과 투표율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여당

〈표 2〉 민주화 이후 재·보궐선거의 여야 의석교체를

| 의석교체 | 사례수 | 의석교체율(%) |
|-------|-----|----------|
| 여당→여당 | 8 | 10.0 |
| 여당→야당 | 31 | 38.8 |
| 야당→여당 | 10 | 12.5 |
| 야당→야당 | 31 | 38.8 |

이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Norris 1990; 조진만·최준영·가상준 2006). 실제로 민주화 이후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무투표로 진행된 광주 동구 보궐선거를 제외하면 여당은 18곳(22.5%)에서 승리하고, 야당은 62곳(77.5%)에서 승리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여당은 이전 총선에서 승리한 39개 재·보궐선거구 중 단지 8곳(20.5%)에서만 승리를 한 반면, 야당은 이전 총선에서 승리한 41개 재·보궐선거구 중 31곳(75.6%)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였지만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 선거구는 31곳인 반면 이전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였지만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 지역은 10곳에 불과하다.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치적 비중이 떨어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부의 정책과 업무수행 등에 대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회고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정부의 정책이나 업무수행에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치적 비중이 큰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자신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가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감수해야 할 외부비용(*external cost*)이 재·보궐선거와 비교하여 대선과 총선에서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Buchanan and Tullock 1962; 강원택 2004). 하지만 대선이나 총선과 비교하여 정치적 비중이 떨어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과 업무수행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³⁾

이때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정치적 비중이 떨어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정부의 정책과 업무수행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경우 정부의 정책과 업무수행에 불만이 있을 경우 정치적 비중이 떨어지는 재·보궐선거에서 다른 정당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처럼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다른 정당을 선택할 경우 일정한 심리적 부담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Boston 1980; King 1968; Mughan 1986; 1988; Norris 1990). 이러한 이유로 의회선거만 존재하는 내각제 국가에서 재·보궐선거는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기 중반에 대부분 실시되기 때문에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기권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여당 후보자들이 고전하는 모습⁴⁾을 보이게 된다(Stray and Silver 1983). 그리고 이것은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낮을수록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기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한국의 경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연구가설을 정립하기에 앞서 다음의 두 가지

-
- 3) 이러한 이유로 재·보궐선거는 지역선거구 차원에서 실시되는 특징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시점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중간평가(*referendum*)적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된다(Lewis 1943; Butler 1949; King 1968; Boston 1980; Kay 1981; Mughan 1986; 1988; Studlar and Sigelman 1987). 한편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구의 이해관계, 후보자의 개성과 매력, 정당조직 우열, 선거전략 등과 같은 지역선거구적 특성이 선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Cook and Ramsden 1973; Pollack 1941). 이 같은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선거시점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Feigert and Norris 1990; Norris 1990을 참조.
 - 4) 이 같은 주장은 투표율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상승-하락(*Surge and Decline*) 이론(Campbell 1960; Born 1990)과도 일맥상통한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선과 비교하여 정치적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략 10%~15% 정도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다. 이때 중간선거에서 기권한 유권자들은 주로 과거 대선에서 여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이며, 이들의 기권이 결국 여당의 의석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Campbell 1985; 1993).

점을 추가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을 보인다(Kernell 1977; Pierson 1975; 가상준 2005; 조진만·최준영·가상준 2006)는 점이다. 둘째, 한국의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내각제 국가와 달리 재·보궐선거가 항상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낮은 시점에서만 실시되지 않는다⁵⁾는 것이다(진영재·조진만 2002).

지금까지의 논의를 고려할 때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과 재·보궐선거 투표율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일단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경우 유권자들은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상관없이 정치적 비중이 적은 재·보궐선거에 투표할 유인을 크게 갖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 재·보궐선거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쟁점이 크게 부각되기 힘들 수 있고,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보상(reward)과 처벌(punishment)의 기제가 충분하게 발현되기 힘든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은 시점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에는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투표를 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은 시점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에는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처벌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투표를 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연구가설 1〉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을수록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보상 기제가 작용하여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높다.”

5)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 임기 초기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공개, 정치자금법 개정, 군 개혁, 금융실명제 실시 등과 같은 강도 높은 개혁과 사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1993년,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70.0%~82.4%). 그리고 이 시기에 실시된 보궐선거들에서 여당의 후보자들이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는 특징을 보였다.

〈연구가설 2〉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을수록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처벌 기제가 작용하여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높다.”

앞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두 개의 연구가설을 정립하였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에서 지역균열이 선거결과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보궐선거가 지역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합적 선거구에서 실시될 경우 처벌과 보상의 관점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재·보궐선거가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선거구에서 실시될 경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보상과 처벌의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의 결과를 고려할 때 지역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가 압도적 득표율과 의석률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의 특징을 고려할 때 지역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합적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와 비교하여 여당 또는 야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투표율이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지역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합적 선거구와 비교하여 여당 또는 야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보상과 처벌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비록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낮더라도 대통령과 여당을 적극적으로 보호(*protection*)한다는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야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도 유권자들은 대통령과 여당을 적극적으로 공격(*attack*)한다는 차원에서 투표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구가설 3〉 “지역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합적 선거구와 비교하여 여당 또는 야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투표율이 높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과 지역주의 외에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의 경합도(*closeness*)를 지적할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Downs 1957)에서 보면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은 선거결과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유권자 한 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페러존과 피오리나(Ferejohn and Fiorina 1974)가 지적한 바 있듯이 재·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아무리 낮더라도 여전히 유권자 한 표가 선거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확률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거의 영점(*nil*)에 가깝다. 그러므로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 자체보다는 선거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과 판단이 투표 참여의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물론 선거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유권자 개인이 투표 참여를 통하여 얻는 효용은 여전히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경쟁이 치열하여 경합도가 높을 경우 후보자와 정당은 선거전략적 차원에서 보다 많은 선거비용을 소비하게 되고, 유권자들을 동원하기 위한 선거운동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Cox and Munger 1989; 한정훈·강현구 2008). 또한 이러한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 전략과 운동은 유권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후보자들 간의 정책적 차별성을 인식하게 하고,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이끈다(Aldrich 1993). 즉 선거경합도는 유권자의 인식과 판단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정당의 유권자 동원과 매개되어 궁극적으로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 논리는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도 동일한 차원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연구가설 4〉 “재·보궐선거 선거구의 경합도가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다.”

마지막으로 재·보궐선거의 투표율과 관련하여 이전 총선 투표율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각 선거구별 투표율 차이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사회경제적 지위나 정치적 성향 등과 관련한 특정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이 선거와 선거 사이—특히 총선이 실시된 이후 재·보궐선거가 다시 실시되는 단기간 동안—에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의 투표율은 이전 총선 투표율과 경로의존(path dependence)적인 관계—이전 총선 투표율이 높을수록 재·보궐선거 투표율도 높음—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독립적 영향력을 적실성 있게 파악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전 총선 투표율을 통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연구가설 5〉 “이전 총선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높다.”

III. 연구모델과 결과 분석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실시된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다중 회귀분석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주요 독립변수를 어떻게 조작화하였는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재·보궐선거 투표율} = & \alpha + \beta_1 \times \text{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 \beta_2 \times \text{대통령 지} \\ & \text{지율}^2 + \beta_3 \times \text{야당 유리 지역주의} + \beta_4 \times \text{여당 유리} \\ & \text{지역주의} + \beta_5 \times \text{재·보궐선거 경합도} + \beta_6 \times \text{이전} \\ & \text{총선 투표율} + \epsilon \end{aligned}$$

첫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가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자료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님께서도 현재 ○○○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질문한 설문을 사용하여 긍정적 대답을 한 응답자의 백분율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 시점 이전의 시기에서 가장 근접한 시점에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을 코딩하였다.

앞서 연구가설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과 재·보궐선거 투표율과의 관계는 비선형적으로 규정되어진다. 즉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은 시점 또는 낮은 시점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투표율은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과 재·보궐선거 투표율 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다중 회귀분석 모델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한 2차의 다항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므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은 시점 또는 낮은 시점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투표율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면 본 연구의 다중 회귀분석 모델에서 회귀계수 β_1 은 음(-)의 값을, 그리고 회귀계수 β_2 는 양(+)의 값을 갖게 될 것이다.⁶⁾

둘째, 지역주의 관련 변수는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에서 영남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열이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여당 또는 야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영남과 호남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경합적 선거구의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준으로 연구사례들을 분류한 후 본 연구는 다중 회귀분석을 위하여 경합적 선거구를 기준변수로 하여 지역주의와 관련한 두 개의 가변수—여당 유리 지역주의와 야당 유리 지역주의—를 설정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주의 관련 변수를 분류한 기준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한다고 분류한

6) 다항회귀모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구자라티(Gujarati 1995)의 저서 217-221쪽을 참조.

기준은 노태우 정부의 경우 3당합당 이전 대구·경북지역, 그리고 3당합당 이후 영남지역이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 초기에는 부산·경남지역,⁷⁾ 그리고 중기 이후에는 영남지역을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곳으로 분류하였다.⁸⁾ 김대중 정부,⁹⁾ 그리고 전국정당과 정책정당을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여 17대 총선에 임하기 이전까지 노무현 정부¹⁰⁾의 경우 호남지역을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곳으로 분류하였다. 현 이명박 정부의 경우 영남지역을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곳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현 이명박 정부의 경우 호남지역, 그리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경우 영남지역을 야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곳으로 분류하였다.

-
- 7) 김영삼 정부 초기 대구·경북지역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김영삼 대통령이 공직자 재산공개, 정치자금법 개정, 금융실명제 실시 등의 강도 높은 개혁과 사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상실함으로써 실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시기 TK정서라는 반여당 정서가 이 지역에 형성되어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곳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선거구를 경합적 선거구로 분류하였다.
 - 8) 김영삼 정권 말기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지역연합적 선거공조가 진행되어 호남지역뿐만 아니라 충청지역에서도 여당에게 불리한 지역주의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충청지역에서 유일하게 실시된 충남 예산시 재선거의 경우 이 지역 출신인 이회창 후보가 경선을 통하여 여당의 대통령후보로 당선된 직후에 실시되어 여당에게도 유리한 지역적 연고주의(*hometown regionalism*)가 구축됨으로써 매우 경쟁적인 선거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충남 예산시 재선거의 경우를 경합적 선거구로 분류하였다.
 - 9) 김대중 정부의 경우 여권의 공조가 파기되기 이전까지 충청지역은 공동정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곳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사례들 중 이 시기 충청지역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없었다.
 - 10) 노무현 정부 시기 충청지역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의 쟁점으로 인하여 여당에게 유리한 소지역주의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충청지역에서 실시된 충남 아산시와 공주시·연기군 재선거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한 불만, 공주 출신 심대평 충남지사의 중부권 통합신당 창당 움직임, 여당 후보 공천 논란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전반적으로 여당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한다고 간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선거구를 경합적 선거구로 분류하였다.

〈표 3〉 재·보궐선거 투표율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

| 변수 | 비표준화 계수(B) | 표준오차 | 표준화 회귀계수(β) | 유의확률(p) |
|---------------------------|-----------------|--------|---------------------|---------|
|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 -.279 | .279 | -.467 | .320 |
|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² | 3.292E-03 | .003 | .547 | .263 |
| 야당 유리 지역주의 | 8.123 | 2.702 | .251 | .002 |
| 여당 유리 지역주의 | 8.542 | 3.158 | .215 | .012 |
| 재·보궐선거 경쟁도 | .121 | .057 | .176 | .038 |
| 이전 총선 투표율 | .951 | .159 | .580 | .000 |
| 상수 | | 11.897 | | .047 |
| F값 | 17.390 (p=.000) | | | |
| 결정계수(R ²) | .605 | | | |
| 사례수(N) | 75 | | | |

셋째, 재·보궐선거의 경합도는 차점자의 득표율을 당선자의 득표율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산출하였다. 그러므로 재·보궐선거의 경합도 수치가 높을수록 당선자와 차점자 간의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았고, 선거경쟁이 경합적인 특징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은 앞서 정립한 연구가설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목적으로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¹¹⁾ 먼저 분산분석의 결과인 F값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들이 재·보궐선거 투표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 적실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역주의, 재·보궐선거 경합도, 이전 총선 투표율이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지역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합적 선거구와 비교하여 여당 또는 야당에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을 경우, 당선자와 차점자 간의 득표율 차이가 적어 재·보궐선거의 경합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이전 총선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준화 회귀계수

11) 본 연구에서 다중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와 모든 독립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하는 입력방식(Enter)을 사용하였다.

와 유의확률을 고려할 때 이전 총선 투표율, 야당 유리 지역주의, 여당 유리 지역주의, 그리고 재·보궐선거의 경합도 순서로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앞서 예상한 것처럼 높은 시점 또는 낮은 시점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투표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전 총선 투표율은 재·보궐선거 투표율과 경로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앞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선거구의 이전 총선 투표율이 1.0% 높을수록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0.9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정 선거구의 총선 투표율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이전 총선 투표율과 재·보궐선거 투표율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총선의 투표율이 제고될 경우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 문제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의미 부여는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역주의의 경우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지역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합적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경우와 비교하여 야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경우에는 8.5%, 그리고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경우 8.1% 투표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한국에서 재·보궐선거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된 쟁점들이 크게 부각되는 가운데 현 정부의 중간평가 내지는 심판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상황 속에서 선거과정이 전개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므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조진만 1998; 2004; 진영재·조진만 2002). 그러나 조진만·최준영·가상준(2006)이 밝힌 바 있듯이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뿐만 아니라 지역주의와 관련한 선거구 특성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¹²⁾ 본 연구의 결

과는 이 같은 재·보궐선거 결과의 특징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주의의 존재 여부에 따라 재·보궐선거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보상과 처벌, 그리고 방어와 공격 차원에서의 투표 참여 유인이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이것이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재·보궐선거의 경합도가 투표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체적으로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재·보궐선거의 경합도가 1점 증가할수록 투표율은 0.1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재·보궐선거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선거경쟁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과 판단, 그리고 이에 따른 후보자와 정당의 동원효과가 투표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재·보궐선거는 지역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상황 속에서 여당과 야당이 모두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특징을 보인다(조진만 1998; 2004). 특히 경합적인 특징을 보이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여당과 야당은 모두 중앙당 차원의 대리전과 총력전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인다.¹²⁾ 그러므로 재·보궐선거의 경합도가 높을수록 후보자와 정당의 동원효과가 극대화되고, 이에 따른 유권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게 된다. 이것은 지역주의 문제 등이 해소되어 보다 경쟁적인 선거구도가 구축될수록, 그리고 이로 인하여 후보자와 정당이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자 노력할수록 한국 선거의 투표율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2)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20.0%로 매우 낮아도 여당에게 유리한 비경합적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여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85.8%에 이른다. 반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80.0%로 매우 높아도 여당에게 불리한 비경합적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여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11.1%에 불과하다(조진만·최준영·가상준 2006, 87).

13)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 시기 15대 총선에서 낙선한 한광옥 초대 노사정위원장이 서울 구로(乙) 재선거에 출마하였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여야 국회의원은 전체 270명의 88.1%인 238명이었다. 그리고 이 중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비롯, 민주당 이만섭 국회의장도 포함되어 있었다(중앙일보 2001/10/26).

마지막으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은 시점 또는 낮은 시점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지만,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된 이유로 일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경우가 적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이들 재·보궐선거에서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보다 지역주의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둘째,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시점에 조사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가장 근접한 이전 시기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도 본 연구의 결과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과 재·보궐선거 투표율 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두 개 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하여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세 가지 요인들 중 세 번째 다중 공선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엄밀하게 말해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관련 두 변수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비선형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 회귀분석 모델에서 다중 공선성이 없어야 한다는 가정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Berry and Feldman 1985, 57-64). 다만 그 특성상 양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r=0.984$, $p=.000$)는 점을 고려할 때 다중 공선성 문제로 인하여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몇 가지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첫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관련 변수들을 제외시킨 다중 회귀분석 모델과 이를 모두 포함시킨 다중 회귀분석 모델의 결정계수, 독립변수의 수, 연구사례의 수를 토대로 조합 F-검정(*joint F-test*)을 수행해보았다(Wooldridge 2003, 142-149). 그 결과 F값은 1.84($df_1=2$, $df_2=69$)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유의확률(p) 0.05 이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관련 두 변수가 다중 공선성의 문제로 인하여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다중 공선성 문제를 고려하여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변수를 다른 차원으로 조작화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분석사례들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평균값, 그리고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50%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시점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을 뺀 두 개의 절대값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각각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해보았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40%~60%를 기준변수로 설정하여 그보다 높은 또는 낮은 연구사례들을 분류한 후 두 개의 가변수—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높음과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낮음—를 만들어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해보았다. 이 모든 다중 회귀분석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점 또는 낮은 시점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투표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확률 0.05 이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앞서 연구가설을 정립할 때 다소 간과하였지만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과 재·보궐선거 투표율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상쇄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본 연구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을수록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보상 기제가 작용하여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경우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기권을 선택할 유인도 충분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 대통령을 정치적 비중이 떨어지는 재·보궐선거에서 표를 통하여 심판하려는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을수록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보상 기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동시에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기권 유인도 작용하게 된다. 이것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을 경우 여당 지지자들의 참여 증가와 야당 지지자들의 기권 증가가 상쇄되어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크게 높지 않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당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을수록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처벌 기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동시에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기권 유인이 작용하게 된다. 왜냐하면 앞서 논의한 바 있듯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을 경우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하여 이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적극적인 반대의사 표명으로서의 타 정당 지지—를 재·보궐선거에서 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권—소극적인 반대의사 표명으로서 정치적 비중이 떨어지는 선거에서의 지지 철회—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은 경우 야당 지지자들의 참여 증가와 여당 지지자들의 기권 증가가 상쇄되어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크게 높지 않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야당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이와 같은 상쇄효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보통 수준을 기록한 시점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와 비교하여 그보다 높거나 낮은 시점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는 점은 재·보궐선거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보상과 처벌의 기제가 기권의 기제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의 특징과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론

민주화 이후 한국은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비교하여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 문제는 정치적 대표성 및 안정성의 문제와 관련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대상으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이전 총선 투표율, 지역주의, 재·보궐선거 경합도가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은 시점 또는 낮은 시점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보상과 처벌로 인하여 투표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이전 총선 투표율과 재·보궐선거 투표율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전국적인 선거의 투표율을 제고할 경우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재·보궐선거의 경우 지역선거구 차원에서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선거시점 중앙정치의 쟁점들이 크게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내지는 심판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은 시점 또는 낮은 시점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투표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즉 재·보궐선거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보상과 처벌의 문제는 투표 참여의 기제로서 일정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진다. 셋째,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보상과 처벌의 강도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 방어와 공격의 기제가 추가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투표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넷째, 재·보궐선거의 경합도가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 지역주의 타파 등을 통하여 보다 경쟁적인 선거구도를 구축하고, 후보자와 정당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정치관계법은 지나치게 규제적인 성격이 강하여 후보자와 정당이 긍정적인 차원의 동원활동을 전개하는 데에도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발전적인 방향에서 각종 규제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임성호 2008).

본 연구의 경우 집합자료를 활용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 재·보궐선거의 투

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변수들을 조작화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일정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보궐선거의 투표 참여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미시적 차원의 분석을 병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즉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에 대한 본 연구의 주요 주장들이 유권자 개인의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국적인 선거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이루어질 때 투표 참여와 정치적 대표성 문제 등에 대한 좀 더 다양한 논의와 제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가상준. 2005. “대통령 지지율과 2004년 대통령선거: 1952~2000년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5집 1호: 153-174.
- 강경태. 2003. “한국 대통령선거 어떤 유권자가 참여하나?: 선거관심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1호: 91-111.
- 강원택. 2002. “투표 불참과 정치적 불만족: 기권과 제3당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2호: 153-174.
- _____. 2004. “한국에서 보궐선거의 특성과 정치적 의미.” 『의정연구』 제10권 1호: 145-166.
- _____. 2008. “투표 참여,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기권자 분석.” 『현대정치연구』 제1권 2호: 75-102.
- 김왕식. 2008. “투표 참여와 기권: 합리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46집: 295-311.
- 김용철·윤성이. 2004. “제17대 총선에서 인터넷의 영향력 분석: 선거관심도와 투표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5호: 197-216.
- 김 욱. 1998. “투표참여와 기권: 누가 왜 투표하는가.”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서울: 푸른길.
- _____. 1999. “거주지 규모와 연령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조중빈 편. 『한국의 선거 III: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서울: 푸른길.
- _____. 2006. “선거의 유형과 투표참여: 지방선거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15집 1호: 99-121.
- 김제한. 1993. “투표참여의 함묵적성: 14대 대선에서의 기권행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9권 1호: 89-100.
- 김진하. 2008. “17대 대선 투표 참여율과 기권.” 『현대정치연구』 제1권 1호: 5-32.
- 박명호. 2006. “재보궐 선거 정치참여에 대한 시론.” 『한국정당학회보』 제5권 1호: 129-146.
- 박찬욱. 1992.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후보인지능력과 투표참여 의사: 제14대 총선 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3호: 153-174.

- 이남영. 1993. “투표참여와 기권: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분석.”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서울: 나남.
- 이재철. 2007. “정치문화와 투표행위: 5·31지방선거에 나타난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 방향과 투표참여.”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2호: 93-121.
- 이준한. 2006. “17대 총선과 유권자의 정치참여.” 어수영 엮음. 『한국의 선거 V: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오름.
- 임성호. 2008. “규제중심 선거관리의 패러독스: 18대 총선과 한국 대의민주주의.” 『현대정치연구』 제1권 2호: 5-36.
- 정준표. 2008. “사회경제적 지위와 투표: 제18대 총선과 제17대 총선의 비교.” 『현대정치연구』 제1권 2호: 37-74.
- 조기숙·김선웅. 2002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16대 총선의 투표율을 낮추었나?”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1호: 163-184.
- 조성대. 2006. “투표참여와 기권의 정치학: 합리적 선택이론의 수리모형과 17대 총선.”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2호: 51-74.
- _____. 2009. “투표 참여와 기권.” 전용주 외 지음. 『투표행태의 이해』.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조진만. 1998. “집권정부의 정치적 지지도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김영삼 정권기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10권 1호: 159-198.
- _____. 2005. “민주화 이후 한국 재·보궐선거의 특징과 정치적 의미.”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2호: 95-122.
- 조진만·최준영. 2006a. “1인 2표 병립제의 도입과 유권자의 투표행태: 일관투표와 분할투표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1호: 71-90.
- _____. 2006b. “17대 총선에 나타난 정당투표 결정요인 분석.” 『정치·정보연구』 제9권 1호: 203-221.
- 조진만·최준영·가상준. 2006. “한국 재·보궐선거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2호: 75-98.
- 진영재·조진만. 2002. “한국 재·보궐선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 제시와 사례 분석: 김영삼과 김대중 정권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1호: 185-202.
-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서울: 후마

니타스.

한정훈·강현구. 2008.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과 정치엘리트의 전략적 행위가 투표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사례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8집 1호: 51-82.

황아란. 1996. “선거구 특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제15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4호: 285-298.

Aldrich, John H. 1993. “Rational Choice and Turnou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 246-278.

Berry, William D., and Stanley Feldman. 1985. *Multiple Regression in Practice*. Sage Publications: Newbury Park.

Born, Richard. 1990. “Surge and Decline, Negative Voting, and the Midterm Loss Phenomenon: A Simultaneous Choice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 615-645.

Boston, Jonathan. 1980. “By-Elections in New Zealand: An Overview.” *Political Science* 32: 103-127.

Buchanan, James, and Gordon Tullock. 1962. *The Calculus of Consent: Logical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Press.

Butler, David. 1949. “Trends in British By-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11: 396-407.

Campbell, Angus. 1960. “Surge and Decline: A Study of Electoral Change.” *Public Opinion Quarterly* 24: 397-418.

Campbell, James E. 1985. “Explaining Presidential Losses in Midterm Congressional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47: 1140-1157.

_____. 1993. *The Presidential Pulse of Congressional Elections*. Lexington: Kentucky University Press.

Caplan, Bryan. 2007. *The Myth of the Rational Voter: Why Democracies Choose Bad Polici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Cook, Chris, and John Ramsden, eds. 1973. *By-Elections in British Politics*. London: Macmillan Press.

Cox, Gary W., and Michael C. Munger. 1989. “Closeness, Expenditures, and Turnout in

- the 1982 U.S. House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 217-231.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 Feigert, Frank B., and Pippa Norris. 1990. “Do By-Elections Constitute Referenda? A Four-Country Comparison.”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5: 183-200.
- Ferejohn, John A., and Morris P. Fiorina. 1974. “The Paradox of Not Voting: A Decision Theoretic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525-536.
- Gujarati, Damodar N. 1995. *Basic Econometrics*. New York: McGraw-Hill, Inc.
- Hinckley, Barbara. 1967. “Interpreting House Midterm Elections: Toward a Measurement of the In-Party’s “Expected” Loss of Sea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1: 691-700.
- Huntington, Samuel P., and Joan M. Nelson. 1976. *No Easy Choice: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ay, Barry J. 1981. “By-Elections as Indicators of Canadian Voting.”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4: 37-52.
- Kernell, Samuel. 1977. “Presidential Popularity and Negative Voting: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the Midterm Congressional Decline of the President’s Par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 44-66.
- King, Anthony. 1988. “Why All Governments Lose By-Elections.” *New Society* 11: 413-415.
- Lazarsfeld, Paul, Bernard Berelson, and Helen Gaudet. 1948.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in a Presidential Campaig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wis, E. G. 1943. *British By-Elections as a Reflection of Public Opinion*.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s in Political Science.
- Lijphart, Arend. 1997. “Unequal Participation: Democracy’s Unsolved Dilemm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 1-14.
- Mughan, Anthony. 1988. “On the By-Election Vote of Governments in Britain.”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3: 29-48.
- _____. 1986. “Toward a Political of Government Vote Losses in Midterm By-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 761-775.

- Powell, G. Bingham. *Contemporary Democracies: Participation, Stability and Viole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 Norris, Pippa. 1990. *British By-Elections: The Volatile Elector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ierson, James. 1975. "Presidential Popularity and Midterm Voting at Different Electoral Level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 683-694.
- Pollock, James K. 1941. "British By-Elections Between the War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35: 607-619.
- Riker, William H., and Peter C. Ordeshook. 1968.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 25-42.
- Sigelman, Lee. 1981. "Special Elections to the U.S. House: Some Descriptive Generalization."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6: 577-588.
- Stray, Stephanie, and Mick Silver. 1983. "Government Popularity, By-Elections and Cycles." *Parliamentary Affairs* 36: 49-55.
- Studlar, Donley T., and Lee Sigelman. 1987. "Special Elections: A Comparative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7: 247-256.
- Upton, Graham J. G. 1991. "The Impact of By-Elections of General Elections: England, 1950-87."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1: 109-119.
-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eisberg, Herbert F., Eric S. Heberlig, and Lisa M. Campoli, eds. 1999. *Classics in Congressional Politics*. Longman: New York. 68-82.
- Wolfinger, Raymond E., and Steven J. Rosenstone. 1980. *Who Vot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Wooldridge, Jeffrey M. 2003.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Thomson: Ohio.

투고일: 2009년 6월 29일, 심사일: 2009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 2009년 7월 31일

〈부록 1〉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 및 투표율 현황: 13대 국회~18대 국회

| 의회 | 대통령 | 선거일 | 선거구 | 투표율(%) |
|-----|-----|---------------|--------------|--------|
| 13대 | 노태우 | 1989. 4. 14. | 강원 동해 | 77.7 |
| | | 1989. 8. 18. | 서울 영등포(乙) | 71.8 |
| | | 1990. 4. 3. | 대구 서(甲) | 64.4 |
| | | | 충북 진천/음성 | 75.2 |
| | | 1990. 11. 9. | 전남 영광/함평 | 66.1 |
| 14대 | 김영삼 | 1993. 4. 23. | 부산 동래(甲) | 40.4 |
| | | | 부산 사하 | 42.1 |
| | | | 경기 광명 | 41.2 |
| | | 1993. 6. 11. | 강원 명주·양양 | 68.5 |
| | | | 강원 철원·화천 | 66.0 |
| | | | 경북 예천 | 71.3 |
| | | 1993. 8. 12. | 대구 동(乙) | 60.1 |
| | | | 강원 춘천 | 58.5 |
| | | 1994. 8. 2. | 대구 수성(甲) | 47.0 |
| | | | 강원 영월·평창 | 63.1 |
| | | | 경북 경주 | 49.6 |
| | | 1997. 3. 5. | 인천 서 | 37.3 |
| | | | 경기 수원 장안 | 32.7 |
| | | 1997. 7. 24. | 경북 포항 북 | 63.1 |
| | | | 충남 예산 | 68.5 |
| | | 1997. 9. 4. | 경기 안양 만안 | 33.1 |
| | | 1998. 1. 6. | 광주 동 | 무투표당선 |
| 15대 | 김대중 | 1998. 4. 2. | 부산 서 | 45.7 |
| | | | 대구 달성 | 59.4 |
| | | | 경북 문경·예천 | 66.3 |
| | | | 경북 의성 | 73.9 |
| | | 1998. 7. 21. | 서울 종로 | 33.7 |
| | | | 서울 서초(甲) | 37.6 |
| | | | 부산 해운대·기장(乙) | 58.3 |
| | | | 대구 북(甲) | 39.8 |
| | | | 경기 수원 팔달 | 26.2 |
| | | | 경기 광명(乙) | 50.8 |
| | | | 강원 강릉(乙) | 54.7 |
| | | 1999. 3. 30. | 서울 구로(乙) | 40.8 |
| | | | 경기 시흥 | 32.2 |
| | | 1999. 6. 3. | 서울 송파(甲) | 46.4 |
| | | | 인천 계양·강화(甲) | 35.2 |
| | | 2001. 10. 25. | 서울 동대문(乙) | 45.6 |
| | | | 서울 구로(乙) | 39.4 |
| | | | 강원 강릉 | 41.0 |
| 16대 | | 2002. 8. 8. | 서울 종로 | 28.9 |
| | | | 서울 금천 | 24.3 |
| | | | 서울 영등포(乙) | 24.0 |
| | | | 부산 부산진(甲) | 29.1 |
| | | | 부산 해운대·기장(甲) | 18.8 |
| | | | 인천 서·강화(乙) | 34.0 |
| | | | | |
| | | | | |

| 의회 | 대통령 | 선거일 | 선거구 | 투표율(%) |
|-------------|-----|---------------|-------------|--------|
| 16대 | 김대중 | 2002. 8. 8. | 광주 북(甲) | 22.4 |
| | | | 경기 광명 | 30.4 |
| | | | 경기 하남 | 36.3 |
| | | | 경기 안성 | 43.5 |
| | | | 전북 군산 | 33.2 |
| | | | 경남 마산 합포 | 29.6 |
| | | | 제주 북제주 | 57.6 |
| | | 2002. 12. 19. | 울산 중 | 68.9 |
| | | 2003. 4. 24. | 서울 양천(乙) | 26.4 |
| | | | 경기 의정부 | 26.0 |
| 경기 고양 덕양(甲) | | | 25.6 | |
| 17대 | 노무현 | 2005. 4. 30. | 경기 성남 중원 | 29.1 |
| | | | 경기 포천·연천 | 38.1 |
| | | | 충남 공주·연기 | 37.9 |
| | | | 충남 아산 | 32.0 |
| | | | 경북 영천 | 59.1 |
| | | | 경남 김해(甲) | 34.2 |
| | | 2005. 10. 26. | 대구 동(乙) | 46.9 |
| | | | 울산 북 | 52.2 |
| | | | 경기 부천 원미(甲) | 28.9 |
| | | | 경기 광주 | 36.7 |
| | | 2006. 7. 26. | 서울 성북(乙) | 28.9 |
| | | | 서울 송파(甲) | 18.1 |
| | | | 경기 부천 소사 | 22.6 |
| | | | 경남 마산(甲) | 28.8 |
| | | 2006. 10. 25. | 인천 남동(乙) | 24.7 |
| | | | 전남 해남/진도 | 40.5 |
| | | 2007. 4. 25. | 대전 서(乙) | 34.6 |
| | | | 경기 화성 | 19.3 |
| | | | 전남 무안/신안 | 54.4 |
| 18대 | 이명박 | 2009. 4. 29. | 인천 부평(乙) | 29.1 |
| | | | 울산 북 | 46.7 |
| | | | 전북 완주(甲) | 37.8 |
| | | | 전북 전주 덕진 | 38.4 |
| | | | 경북 경주 | 53.8 |
| | | | | |

〈부록 2〉 기술통계

| 항목 | 사례수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재·보궐선거 투표율 | 80 | 18.1 | 77.7 | 43.2 | 15.7 |
| 이전 총선 투표율 | 80 | 42.1 | 85.1 | 62.0 | 9.6 |
| 재·보궐선거 경합도 | 80 | 17.9 | 97.0 | 67.3 | 21.0 |
| 대통령 지지율 | 75 | 8.7 | 86.5 | 40.9 | 24.0 |
| 야당 유리 지역주의 | 80 | 0.0 | 1.0 | 0.23 | 0.42 |
| 여당 유리 지역주의 | 80 | 0.0 | 1.0 | 0.18 | 0.38 |

ABSTRACT

What Determines the Turnouts of the By(Re)-Elections in Korea since Democratization?

Jinman Cho | Inha University

The low turnouts of the elections in Korea since democratization have been regarded as a serious obstacle for democratic consolidation. Especially, the very low turnouts recorded below 30 percent of the by(re)-elections in Korea have given rise to the serious anxiety with regard to political representation. Nevertheless, it has not studied or analyzed at all what factors influence the turnouts of the by(re)-elections in Korea.

In this vein,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 factors affecting the turnouts of the by(re)-elections in Korea since democratization. To be more specific, the statistical model of this stud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by(re)-elections, includes several variables like the turnouts of the previous general elections,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regionalism, and electoral closeness to explain the turnouts of the by(re)-elections in Korea since democratization.

Based on the statistical results of the model, the study shows that the turnouts of the previous general elections, regionalism, and electoral closeness play an important roles in the turnout of the by(re)-elections in Korea since democratiz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general public mood for the political performance of president will affect the turnouts and outcomes of the by(re)-elections in Korea.

Key Words | Korea, By(Re)-Elections, Turnout,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Regionalism, Electoral Closeness